

## 한국의 고속성장에서 정부의 역할

유 정 호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한국은 1960년대 초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으며 토지나 여타 자연자원은 빈약하고 과학기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낙후한 수준에 있었다. 그 후 약 20년 동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였으나, 한국경제는 농업 중심의, 개도국 전형적인 침체 경제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공업화하는, 활력 넘치는 신흥공업경제로 변신하였다. 한국의 이러한 경험과 대만, 싱가포르, 홍콩의 유사하게 빠른 성장경험을 사람들은 흔히 동아시아의 기적이라 부른다. 이는 빠른 성장과 공업화를 열망하는 많은 개도국에게 큰 희망이자 도전이다. 그러나 이 현상을 보는 눈은 다양하며 기적의 이유에 대해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우선,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속성장은 거의 모두 생산요소의 투입증가로 인한 것이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없으므로 기적이라 부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sup>1)</sup> 그렇지만 장기에 걸쳐 세계경제사에 유례없이 빠른 성장을 이뤘다는 뜻에서 기적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관심거리는 그 고속성장이 가능했던 이유, 그 가운데에서도 정부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이에 관해 비전문가들뿐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들은 “수정주의”라 불리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경제 활동의 방향과 크기를 시장이 결정하도록 맡겨놓지 않고 간섭하였던 것이 동아시아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다는 견해이다.<sup>2)</sup>

이같은 견해는 한국의 경우, “기아선상”에서 국민들을 구하겠다는 혁명공약 아래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를 통해 집권을 시작한 1961년과 경제 고속성장의 시작이 시기적으로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신뢰를 얻고 있는 듯하다. 그는 국가재건에 헌신하였던 만큼 반대자들에게는 무자비하였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은 명목적으로 보장되어 있었으나 언제든지 정부가 빼앗아 갈 수 있었다. 시중은행들은 쿠데타 이후 국유화되었고, 경제는 겉으로 시장경제였으나, 실제로는 정부

1) 한 예로 Krugman(1994) 참조.

2) 대표적인 예로 Amsden(1989) 참조.

가 필요에 따라 언제나 간섭하고 경영·관리하였던 정부주도 경제이었다. 이 시대의 모습에 관해서, “지난 세대에는 경제성장을 앞세우느라 법은 뒷전으로 밀렸다.”거나 혹은 그와 유사한 표현을 흔히 듣는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간섭과 통제는, 그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 받는 일이 있더라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우리사회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수정주의 견해가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정부정책과 어떤 경제성고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이 둘 사이에 인과의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단정하기 전에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그 관계를 검토해봐야 한다.

이 검토가 이 글의 주제이다. 첫째, 고속성장을 이끈 수출 증대가 1960년대 초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둘째, 수출은 1970년대에도 두 자리 수의 증가를 지속하였는데 이에 대해 수출촉진정책은 어떤 기여를 하였는가, 셋째, 간섭주의 정책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정책의 효과는 무엇이었는가, 등을 검토한다. 이런 검토 끝에 이 글은, 정부의 간섭주의 정책이 우리경제의 고속 성장과 공업화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의 신화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는 우리 경제의 고속성장에 정부의 기여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나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 성공적인 세정 개혁, 보수적인 재정정책 운용, 등등 여러 정책을 통해 정부는 고속 성장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였음에 틀림없다. 그 외에도 불완전하지만 법과 질서의 유지와 같은 고전적인 정부 역할의 수행 등은 경이적 경제성과의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고속성장이 정부의 간섭주의 경제정책 때문에 가능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끝으로, 이 글은 지금까지 주목 받지 못한, 세계시장 규모의 크기가 우리 경제의 고속성장에 미친 영향에 관해 논의한다.

## 1. 1960년대 초의 수출급증<sup>3)</sup>

한국경제에서 수출 증가의 기여는 절대적이었다. 실질기준으로 1960년대에 매년 평균 40%, 1970년대에 매년 평균 26% 증가했던 수출이 없었더라면 우리경제의 고속 성장과 공업화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같이 높은 두 자리 수의 수출 증가는 1960년대 초에 갑자기 시작하였다. 왜 수출의 고속 증가가 갑자기 시작하였는지 그리고 왜 오래 지속되었는지 그 이유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경제 고속성장의 경험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관한 기존의 설명은 대체로 이러하다. 당시 세계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교역량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고 임금이 낮은 노동력을 풍부히 가지고 있어, 대내외로 수출 증대에 좋은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 위에 새로이 집권한 군사정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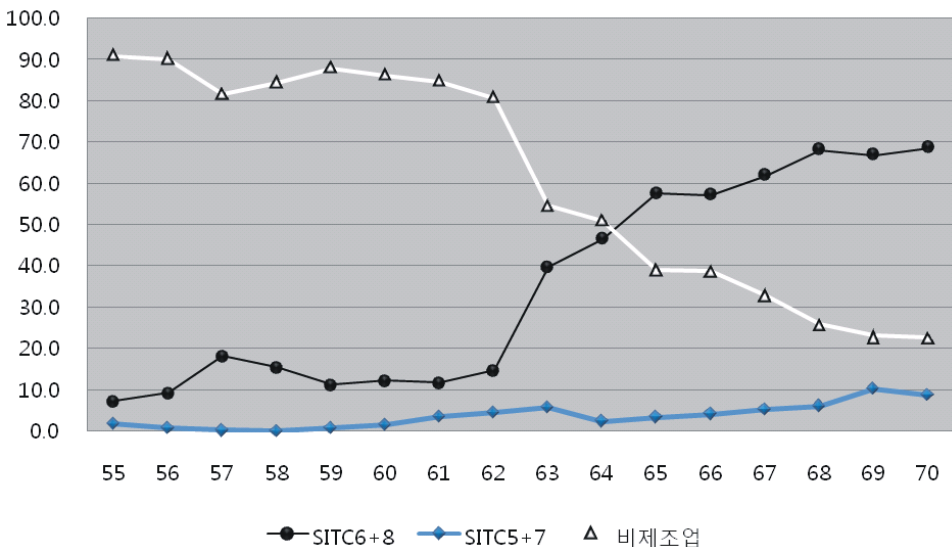
3) 이 소제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논문을 참조. Yoo, Jungho, “How Korea’s Rapid Export Expansion Began in the 1960s: The Role of Foreign Exchange Rate,” Working Paper 08-18,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2008.

종래의 수입대체를 통한 개발전략을 버리고 수출촉진을 통한 개발전략을 택한 것이 수출급증을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깔끔한 설명이지만 사실이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다. 수출의 고속 증가는 정책 전환이 있기 전에 시작하였다. 이는 이 글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점 가운데 하나이므로 이에 대해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수출의 고속 증가가 언제 시작했는지 살펴보자. 총수출은 1950년대 내내 등락을 거듭하다가 1959년부터 두 자리 수의 증가가 시작하여 1970년대 말까지 지속한다. 그러나 1959년의 증가는 일시적인 농수산물 수출 급증으로 인한 것이었고, 그 후 우리 수출의 증가는 늘 제조업제품이 선도하였고 그 가운데에서도 노동집약적인 제품이 선도하였다. 이 제조업 제품의 수출 증가가 우리 경제의 공업화를 이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수출의 고속 증가는 제조업제품이 급증하기 시작하는 때 혹은 제조업 제품 중에서도 노동집약적 제품의 급증이 시작하는 때에 시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1960년부터 1962년 사이에 수출의 고속 증가가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광산물과 농산물이 주종이었던 비제조업(非製造業)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는 곧 그 해에 제조업제품의 수출이 총수출의 증가를 선도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1962년에는 표준국제무역분류(SITC) 6(원료별 제품)과 8(잡제품)의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주로 의류, 신발, 여행용구, 가발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제품이다. 1963년에는 이미 이러한 특성을 가진 한국 수출 고속팽창의 추세가 의문의 여지없이 뚜렷하게 되었다.

<그림 1> 수출상품구성



정부의 개발전략이 수입대체에서 수출촉진으로 바뀌는 것은 그 다음이다. 이 전환은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정한 “보완계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1962년이 시작년도인 원래의 제1차 계획은 ‘수입대체’가 정부의 주된 개발전략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계획에는 제조업 제품의 수출이 증대할 것이란 기대도 없고 제조업 제품의 증대를 통해 공업화를 이루겠다는 전략도 찾아볼 수 없다. 수출은 당시 심각했던 외화부족을 치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었을 따름이다. 그러나 1964년 2월에 발표하는 “보완계획”에는 개발전략이 ‘수출촉진’으로 전환되어있다. 정부는 단순히 수출의 증대 뿐 아니라 수출산업의 육성을 새로운 정책목표로 삼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투자를 조정하여 수입대체 산업에서 수출 산업으로 재분배하겠다는 의지도 밝힌다. 같은 해 6월 정부는, 과거의 수출 증대를 위한 시책들이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수출진흥을 위한 일관된 기조와 종합적인 테두리를 마련하기 위해 “수출진흥 종합시책”을 발표한다. 수출 드라이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였던 “수출진흥확대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기 시작하는 것은 1965년 10월이었다.

1960년대 초에 수출 급증이 일어난 다음 정부의 발전 전략이 수입대체에서 수출촉진으로 바뀐 것인데, 이 정책 전환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다. 한국경제는 미국 원조에 의존하여 만성적 무역적자를 보전했었는데 이 원조는 1957년 이후 감소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수출 증가는 심각한 외화부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외화 수입원(收入源)이었다. 또, 제조업 제품의 수출증가는 미숙련 노동인력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공업화와 경제성장의 새 길을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이는 당시 군사 정부가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 경제재건에 총력을 경주”하겠다는 혁명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새 정부가 정치적 합법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정부는 1960년 중반 이후 수출촉진에 총력을 기울인다. 그러므로 제조업제품의 수출급증은 정부의 개발전략이 수입대체에서 수출촉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수출급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책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 1960년대 초의 수출급증은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정부는 원화의 과대평가로 매우 힘들어진 수출에 대한 유인(誘因)을 높여주기 위해, 수출보조금 지급, 수출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수출품 생산을 위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감면, 등등의 여러 가지 간접주의 시책을 채택하고 있었는데, 정부의 이런 시책들이 수출급증을 일으킨 요인이었던 것이라는 가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수출업자들의 원화 수입(收入)을 이런 시책들이 얼마나 높였는지 살펴보면, 그 실제 기여는 매우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Frank · Kim · Westphal(공저, 1975)의 추정에 의하면, 수출 급증이 일어났던 1960년대 초에 그 기여는 수출업자들의 수입(收入) 가운데 1% 내외에서 최대 12%의 비중을 가진 정도였다. 또 이를 포함한 수출업자들의 총 수입(收入)과 수출과의 상관관계도 낮았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Yoo(2008)는 그동안 주목 받지 않았던 1960년대 초의 세 번의 평가절하에 주목한다. 대미달러

공정환율은 1960년 2월에 50:1에서 65:1로, 1961년 1월에 100:1로, 1961년 2월에 다시 130:1로 바뀐다. 일 년 사이에 160% 상승한 것이다. 이로서 1950년대 내내 지속되던 원화의 과대평가가 거의 완전히 사라진다. 이와 동시에 우리 수출은 제조업체품을 주축으로 1960-62년 기간에 급등한다. 과연 이 세 번의 평가절하는 제조업체품 수출 급등의 원인인가? Yoo(2008)의 1957-1970년 기간에 대한 회귀분석에 의하면, 원화의 과대평가와 제조업체품 수출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負)의 관계가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한국경제는 제조업체품에 강한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1960년대 초까지 원화의 과대평가가 그 잠재력 발휘를 억제하고 있었으며, 세 번의 평가절하로 원화의 과대평가가 사라지면서 억제되었던 제조업체품의 수출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었다. 개별 상품의 수준에서 수출동향을 관찰하면, 세 번의 평가절하 직후, 광산물, 농산물, 등 기존의 수출 주종 상품은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노동집약적 제조업체품들은 새로운 수출 상품으로 등장하자마자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곧 주종 상품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1960년대 초에 노동집약적 제조업체품 수출의 높은 두 자리 수의 증가를 촉발한 것은 원화의 과대평가를 거의 완전히 없애버린 세 번의 평가절하였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이 글의 관심사에 비추어 수출급등을 촉발한 세 번의 평가절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다. 6·25사변 발발 직후 한국정부는 UN군에게 원화를 선대(先貸)하여 그들의 원화경비지출에 충당하도록 하고 추후에 공정 환율로 환산한 미 달러 상환금을 받는다는 협정을 미국정부와 맺는다. 당시 한국은 심각한 외화부족을 겪고 있었고 이 달러 상환금이 일 년 외화총수입의 60-70%에 달했으므로, 한국정부는 되도록 낮은 공정 환율을 오래 유지하려 하였고 미국은 그 반대의 입장에 있었다. 따라서 공정 환율은 항상 두 정부 사이의 줄다리기의 결과로 결정되었다. 한국은행(1960)에 의하면, 1960년 2월의 평가절하는, 도매물가지수가 일정률 이상 상승하면 환율을 다시 책정하기로 한 한미 간 합의 때문에 이뤄진 것인데,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마지못한 것이었고, 1961년 1월의 평가절하는 1960년 4·19학생혁명으로 군사원조 외에 정지된 양국 간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계기에 미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 두 번의 평가절하에서는 환율을 현실화하려는 정부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961년 2월의 평가절하는 4·19학생혁명이후 새로이 집권한 장면 정부가 복수환율제도를 버리고 단일환율제도를 택하면서 환율을 현실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정부의 발전전략은 앞서 논의한 것처럼 수입대체를 통한 공업화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1960년대 초에 원화의 과대평가를 거의 완전히 제거하여 수출 급등의 계기를 만들었던 세 번의 평가절하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의 성격이 짙으며 정부가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내린 정책 결정이라 하기 어렵다.

## 2. 1960년대 중반 이후의 수출촉진 시책

이렇게 볼 때, 정부가 수입대체에서 수출촉진으로 개발전략을 전환한 것은, 의도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았던 수출급증이 정책전환의 필요성을 분명히 제시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명백해졌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인식하고 실제로 정책을 바른 방향으로 전환 한다는 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간단하거나 쉬운 일은 아니다. 한국정부가, 1960년대 초에 수출이 급증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 후에 수출 촉진을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기울인 것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정부는 여러 가지 수출촉진 시책을 채택한다. 1964년 5월 대미달러 환율을 130:1에서 256.5:1로 100% 가까이 인상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출진흥 종합시책”을 그해 6월에 발표하였으며, 수출 금융의 종류를 늘리고, 수출 달러당 은행용자의 비율을 높이며 금리를 일반금리에 비해 대폭 낮추는 등, 수출 지원 금융을 확대 강화하였다. 조세 측면에서 수출업자에게만 해당되던 영업세 면제를 수출품제조업자와 수출용원자재 생산자에게까지 확대하고, 관세면제를 수출용원자재 수입뿐 아니라 수출용 시설재 수입에도 적용하였다. 세제상 지원이 수출에서 수출산업으로 확대된 것이다. 1965년에는 수출용 수입원자재 가운데 일정량을 감모로 인정하는 감모허용 제도, 수출용 원자재를 생산하는 국내업자가 수출업자와 동일한 우대를 받게 하는 로칼 L/C 제도, 등등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그해 10월에는 “수출진흥확대회의”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 시작한다. 한마디로, 정부는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고속성장에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견해는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이 경이적인 수출증대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단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실이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수입정책이 서서히 자유화의 길을 걷고 있었으나 아직도 매우 보호주의적이었다는 사실이다. 1960년대 평균 관세율은 50% 정도이었고 수입자유품목의 비중은 10% 미만이었으며, 1970년대 후반에도 관세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수입자유품목이 늘었지만 그 비중은 아직도 절반에 못 미치고 있었다.<sup>4)</sup> 그런데 이런 보호주의 정책은 수출의 이윤은 높이지 못하는 반면 국내 판매의 이윤은 높이는 것이므로 국내자원이 수출을 위한 생산에서 국내 판매를 위한 생산으로 재분배 되도록 한다. 또, 수입 억제에 외환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므로 환율을 떨어뜨려 원화의 과대평가를 가져온다. 이 두 통로를 통해 보호주의 정책은 수출을 저해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수출을 촉진하는 정책과 수출을 저해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수출촉진 시책이 경이적 수출증대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두 정책의 수출촉진 효과와 수출저해 효과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김광석·웨스트 팔(1976)에 의하면, 수출촉진 정책의 효과는 보호주의 수입정책이 수출을 저해하는 효과를 거의 정확히 상쇄하는 것이었다. 즉, 두 정책이 제조업자에게 주는 국내판매에의 유인과 수출판매에의

---

4) Table 3.6, Kim, Kwang Suk(1991).

유인이 거의 같은 것으로 추정된 것이다. 이 분석 및 추정의 정확성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연구가 이 글의 주제에 관해 제시하는 의미는 매우 분명하다. 그것은, 당시 보호주의 수입 정책은 상당한 정도의 수출 저해 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무시하고 수출촉진 시책이 경이적 수출 증대를 이뤘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수출촉진 시책들의 기여는 보호주의 정책의 수출 저해 효과를 상쇄하였다는 데 있었다. 만약 보호주의 정책이 없었는데 정부가 수출촉진 정책을 추진 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우리 물건을 싼 값으로 외국에 넘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물량으로 따진 수출은 증대하였겠지만 그것은 가난한 한 국가 부유한 외국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았을 것이고, 다른 한편 수출을 위한 생산으로 자원이 과도하게 배분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수출촉진과 보호주의를 동시에 추구한 것이 정부의 지혜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매우 의문스럽다. 수출촉진은 수출의 이윤을 높여주고 보호주의 정책은 국내 판매의 이윤을 높여준다. 그러므로 수출촉진 정책과 보호주의 수입정책을 함께 추구함으로써 얻은 효과는, 수출용 및 국내 판매용 상품, 즉 모든 상품의 생산에 대한 유인을 서비스 생산에 비해 높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효과는, 수출촉진이나 보호주의 수입정책에 따르는 번거로움이나 부작용 없이, 환율정책으로 간단히 얻을 수 있다. 원화의 평가절하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을 국제 거래가 어려운 서비스의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이는 것이므로, 원화의 평가절하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정부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보호주의 무역정책으로 우리경제가 세계시장으로 가는 길에 장애를 설치한 다음 수출촉진 정책으로 이를 제거한 셈이다. 이를 근거로 우리 수출의 경이적 증대를 정부 정책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라 한다면, 그것은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

### 3.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정책

중화학공업정책은 단지 하나의 시장개입이라기보다는 경제의 체질을 바꾸려는 정책이었으며 정부가 경제를 경영 내지 관리하려는 시도였다. 이 정책은 1973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선언으로 시작되어 박 대통령의 시해 사건 6개월 전이었던 1979년 4월 정부가 “종합안정화시책”을 발표함으로써 종료됐다고 볼 수 있다.<sup>5)</sup> 그 정책은 철강, 비철금속, 전자, 화학, 일반기계, 조선, 등 6개의 선정된 전략산업을 보호·육성함으로써 제조업을 “중화학공업화”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해 청와대에 제2 경제수석비서관이 단장을 맡는 중화학기획단이 설립되어, 공업단지 조성, 개별 사업체 내지 공장 단위의 연도별 투자계획, 생산 및 수출계획 등 매우 자세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기업가들이 전망이 불확실한 대규모 사업에 참여하기를 주저하였으므로 주요 사업에 관해서는 기업가에게 유인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참여를 강제하기

---

5) 경제기획원(1982)의 제4장 및 제6장 참조.

도 하였다. 중화학공업정책의 추진은 전투수행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금융 및 비금융 기업들은 경제재건이란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대리인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현재 여러 산업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재벌이라 불리는 기업집단이 형성되었고 성장하였다.

정부는 1960년대에 수출 증대를 추진하던 때 그랬던 것처럼 1970년대에도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였다. 다른 점은 이제 정책목표가 수출촉진이 아니라 선별된 전략산업의 육성이라는 것이었다. 국유화되어있던 상업은행들과 한국산업은행 및 여타 금융기관을 통해 그리고 국민투자기금을 신설하여 특혜성 높은 정책금융을 공급하였고,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전략 산업에 대한 세율은 삭감하는 한편 여타 산업에 대한 세율은 높였으며, 무역정책은 수출촉진에서 다시 수입대체로 기울어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면제를 축소하고 전략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였다.<sup>6)</sup>

이같은 정책은 당연히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고 경공업에 비해 성장을 가속시킬 것이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정책의 성패는 중화학공업의 성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 정책이 경제전체의 성과를 높였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이는 반사실적(反事實的)인 질문이다. 경제전체의 성과가 중화학공업정책 때문에 그 정책이 없었을 경우에 비해 더 높아졌느냐 여부를 묻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이 무엇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그 답이 대체로 어떤 것인지 가늠해볼 수는 있다. 우선 그 정책이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봐야 한다. 만약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그 정책의 경제성과에 대한 영향을 논의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이다. 영향을 미쳤다면 그 영향이 경제성과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지 알아봐야 한다.

중화학공업정책의 자원배분에 대한 영향은 지대하였다. 중화학공업정책이 적극 추진되던 1970년대 후반, 중화학공업은 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지만 제조업 전체가 생산하는 부가가치의 30%에서 45% 정도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시설투자는 제조업 전체의 75% 이상이 매년 중화학공업에 집중 되고 있었다.<sup>7)</sup> 다른 증거를 보면, 중화학공업의 자본/노동 비율은 그 정책이 추진되던 1973-80년 기간에 여타 제조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정책이 중단된 다음에는 반전되어 1980-85년의 기간에 여타 제조업의 증가율에 절반에 못 미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sup>8)</sup> 정책이 진행되는 동안 정책금융의 금리가 당시 인플레이션보다 낮았으므로 그 혜택을 받는 중화학공업들에게는 자본비용이 영(零)에 가까웠고 여타 제조업에게는 높을 수밖에 없었으며, 1980년대 초에 정부가 정책금융 자체를 없애면서 중화학공업들에게 자본비용이 높아지고 여타 제조업들에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중화학공업정책이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쳤다는 매우 뚜렷한 증거이다.

6) 1974년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은, 30~40% 수준이던 “유효한계법인세율”을 중화학공업에 대해서는 20% 미만으로 낮추는 한편 여타 제조업에 대해서는 50% 가까이 높였다. 이에 관해 곽태원(1985) 참조.

7) Suk-Chae Lee(1991).

8) Stern et al (1995)의 4장 “Overview of Result”.



그 결과 경제성과는 제고되었는가? 특히, 제조업의 부가가치 생산은 증대하였는가? 유정호 (1991)의 추정에 의하면, 중화학공업정책이 추진되는 동안 여타 제조업의 자본생산성은 중화학공업에 비해 20% 내지 30% 높았다. 중화학공업 제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고 그 때문에 그 제품들의 국내시장 가격이 높아졌던 것까지 감안하면 그 차이는 30 내지 40%로 벌어진다. 이는,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를 실제로 되었던 것보다 줄이고 그 투자를 여타 제조업으로 돌렸더라면 제조업부문의 부가가치 생산이 더 증가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달리 표현하면, 중화학공업정책으로 인해 제조업의 부가가치 생산이 감소한 것이다.

중화학공업정책이 추진되던 1970년대 후반, 바로 이때에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1980년에는 영(零) 이하로 떨어졌다. 이 경제상황의 악화는 수출이 주도하였는데 실질기준으로 수출의 증가율은 1976년에 36%에 달한 이후 그 다음 두 해에는 19%, 14%로 급락했고 1979년에는 수출규모가 줄어들었다. 수출과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던 투자도 실질기준으로 그 증가율이 1979년에 크게 둔화하더니 1980년에는 투자규모가 줄어들었다. 이같은 경제상황의 악화와 중화학공업정책은 무슨 연관이 있는가? 1980년의 부(負)의 경제성장은 일반적으로, 제2차 세계석유파동으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 그해 냉해로 인한 농업부문 생산의 대폭적인 감소, 박 대통령 시해 이후 정치·사회 불안, 등 세 요인 때문이었다고 설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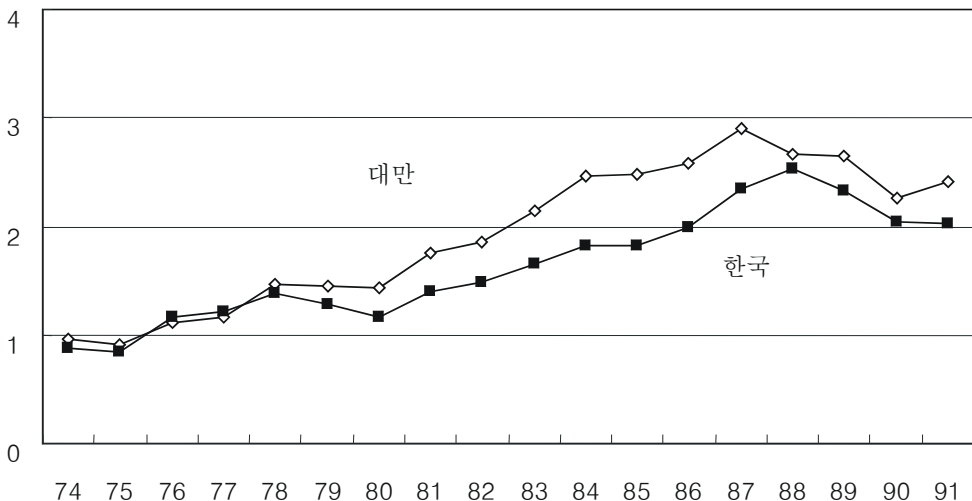
이 가운데 냉해는 1980년에 있었고 박 대통령 시해는 1979년 10월의 일이었다. 이 두 사건이 그보다 먼저 1970년 후반에 일어나고 있던 수출 및 투자 상황의 악화의 원인일 수는 없다. 세계경기 침체는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을 고려할 때 악재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우리 수출 감소의 주된 원인은 세계경제에 있지 않았다. 아래에서 논의 하듯이, 그 원인은 우리 수출의 경쟁력 하락이었다. 1970년대 후반에 경쟁국에 비해 경쟁력이 점점 뒤쳐지고 있었고 그것이 우리 수출의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 설명이 빠진 당시 경제상황의 악화에 대한 설명은 매우 미흡한 것이다.

1970년대 말에 나타난 우리 수출경쟁력의 하락은 중화학공업정책과 관련이 있었는가? 이는 이 글의 주제에 비추어 중요한 질문인데, 이 역시 반사실적(反事實的)인 질문이다. 즉, 중화학공업정책이 없었더라면 우리 수출경쟁력이 어떠했을까하는 질문이며, 이에 대한 정답은 알 수 없다. 다만 정답을 가능해볼 수 있는 방증(傍證)을 찾아볼 수 있을 따름이다. 이런 목적으로 유정호 (1997)는 1974-91년 기간에 한국과 대만의 수출이 OECD의 제조업제품 수입 가운데 차지하는 점유율을 비교하고 있다. 대만은 한국처럼 높은 인구밀도에 자연자원이 빈약하며, 1970년대 중반에 한국과 유사한 경제발전 단계에 있었고, 노동집약적 제조업제품이 총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수출상품 구성이 다른 어떤 두 국가보다 서로 더 유사하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정책에 관해 한국과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대만에서도 1970년대 중반 이후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추진되었으나, 한국의 정책은 중화학공업에 속한 기업들만 정책의 우대를 받는, 철저히 차별적인 것이었음에 비해, 대만의 경우에는 육성 대상으로 선택된 산업과 여타 산업에 대한 차별이 시간이 지남

에 따라 퇴색하여 육성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산업들도 정책 우대를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대만의 기업들은 정부의 전략산업 육성정책에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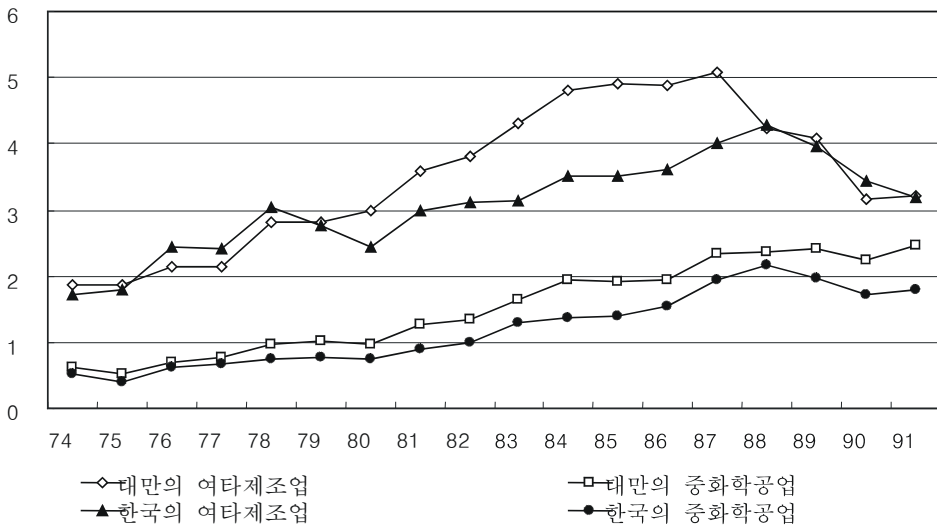
그러므로 대만의 OECD 시장점유율을 관찰함으로써, 중화학공업정책 없었더라면 한국의 점유율이 어떠했을까 하는 반사실적 질문에 대한 답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가 보여주는 것처럼, 1970년대 중반까지 한국과 대만의 수출이 OECD 제조업제품 수입 가운데 차지하는 점유율에 별 차이가 없었다. 그후 1978-80년 기간에 대만의 점유율은 거의 변함이 없었으나 한국의 점유율은 1.38%에서 1.29%, 1.16%로 줄어 대만의 점유율보다 낮아졌다. 한국 수출의 경쟁력이 대만에 비해 하락하였다는 증거다. 1980년대에 양국 사이에 점유율 격차는 점차 더 벌어졌고 1990년대 초까지 격차는 지속되었다. <그림 3>은 제조업을 중화학공업들과 여타 제조업의 두 산업군으로 나눠 각각의 점유율을 비교한 것인데, 양국 간의 점유율 격차가 중화학공업정책의 혜택을 받았던 산업과 그렇지 않았던 여타 산업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고자한 것이다. 중화학공업의 경우 대만의 점유율은 한국보다 항상 높은 편이었고 이 격차는 완만한 속도로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타 제조업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1970년대 후반에 대만보다 더 커지고 있었으나 1979년과 1980년에 더 작아졌고, 그 격차는 그 후 점차 더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당시 한국 총수출 증가율의 급격한 하락은 세계경제의 침체에 원인이 있었다기보다는 우리 수출경쟁력, 특히 경공업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여타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하락에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그림 2> OECD 제조업제품 수입 중 점유율(%)



9) 이 점에 관해서는 Chen(1999) 참고.

〈그림 3〉 OECD 제조업제품 수입 중 한국·대만의 산업별 점유율(%)



이 경공업부문의 수출경쟁력 하락은 중화학공업정책의 영향인가? 그렇게 볼 이유가 있다. 중화학공업정책은 선택된 전략적 산업에 대해 정책금융, 조세감면, 보호무역정책의 혜택을 부여했다. 이 세상에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정부는 없고 한국정부도 예외가 아니므로, 정부가 특정 산업에 특혜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 비용을 경제 내의 누군가가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금융을 몰아주는 비용은 그 만큼 다른 산업들에게 신용이 귀해지는 것이고, 조세감면의 비용은 그 만큼 다른 산업의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며, 무역정책을 통한 전략산업 보호 강화의 비용은 보호받는 중화학공업 제품의 가격이 국내시장에서 상승하는 것인데, 그 높아진 가격은 다른 산업의 부담이 되어 생산비가 높아지는 것이다.<sup>10)</sup> 이렇게 중화학공업에 대한 정책 특혜의 비용은 당시 우리수출의 대부분을 생산하던 경공업이 주로 부담하였고, 그 결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하락한 것이다. 정부가 중화학공업정책을 추진하지 않았거나 대만의 경우처럼 그 정책의 산업차별성이 적었다더라면 우리의 경공업들도 대만의 경공업처럼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의 하락을 경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높여갔을 것이다. 1970년대 경공업의 수출경쟁력 하락이 총수출의 증가율 둔화와 수출규모 자체의 감소를 주도했고, 이것이 투자를 위축시켜 투자규모의 감소로 이어졌으며, 결국 1980년에 국내총생산이 축소하였던 주된 원인이었다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재 많은 논평자들이 중화학공업정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중화학공업은 투자의 회임기간이 길기 때문에 단기에는 효과를 내지 못하므로

10) 여타 제조업의 조세 부담 증가에 관해서는 앞의 주 6)를 참조.

그 효과를 장기에 걸쳐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이는 반쪽의 지적이다. 오랜 기간 후에 나타나는 경제성과가 같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경제성과가 그만큼 더 커야 한다. 1970년대 중반에 제조업 부문의 자본 생산성이 약 20%이었음을 상기할 때, 그 5년 후에 나타나는 경제성과는 당장 나타나는 성과에 비해 약 2.5배 커야 같은 성과를 내었다 할 수 있고, 10년 후에 나타나는 성과는 6.2배 정도가 되어야 같은 성과를 내었다 할 수 있다. 장기에 걸쳐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효과는 이 같은 계산을 거쳐 평가 받아야 하는 것이다. 중화학공업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둘째 이유는, 1980년대 후반 소위 “3저”의 도래로 기회가 왔을 때 중화학공업정책이 육성했던 제조업들 때문에 수출이 증대했고 그 때문에 경상수지의 흑자 전환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sup>11)</sup> 그러나 그 수출 증대 및 경상수지의 개선은 한국경제가 기회를 선용한 결과라 보기보다는, 당시 미국 경제의 재정 및 무역의 쌍둥이 적자를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사실 미국의 교역상대국은 모두 미국과의 양자간 무역수지의 개선을 경험했던 것이다.<sup>12)</sup> 달리 표현하면, 우리 수출의 상품구조가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유리하기 때문에 대미 무역수지 개선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중화학공업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셋째 이유는, 현재 우리 경제가 중화학공업정책이 육성했던 전략산업들 때문에 “먹고산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림 3>에서 대만의 경우를 관찰하면 알 수 있듯이, 대만은 한국과 같이 산업 차별성이 높은 중화학공업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으나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한국보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다. 중화학공업의 성장 및 발전에 정부의 육성정책이 불가결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의 중화학공업정책이 경국(傾國)의 정책이었고 다른 산업들의 희생을 강요한 정책이었음 고려할 때 그 때 육성한 전략산업이 현재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성공한 산업이 10중 8개라도 지금 우리 경제는 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10중 3개만 성공하였더라도 지금 우리 경제는 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화학공업정책이 육성했던 전략산업들 때문에 “먹고산다”는 논리는 그 정책의 성공여부를 가리는 논리가 될 수 없다. 그 정책의 효과를 바르게 평가하려면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반사실적(反事實的) 증거에서 찾아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 4. 세계시장규모의 공업화속도에 대한 영향

그러므로 우리 경제의 고속성장 과정에서 중화학공업정책의 경험은, 수정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정부에 의한 경제의 관리 내지 경영이 우리 경제의 고속 성장과 공업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신고전파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우리 정부의 성장전략의 대외지향적 측면이 경제기적을 이뤄내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입장이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수입대체를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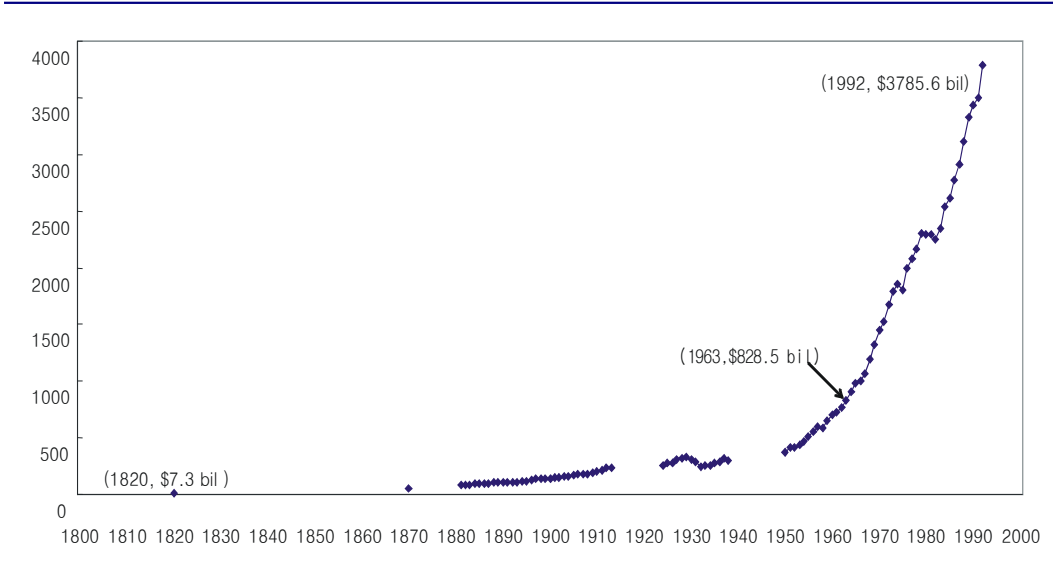
11) 3저는 국제금리, 국제원유가격, 일본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거의 같은 시기에 낮았던 현상을 가리킨다.

12) 당시 미국과의 양자간 무역수지가 악화된 교역 상대국들은 산유국들뿐이었는데 그 이유는 국제원유가격의 하락이었다.

한 공업화에서 수출축진을 통한 공업화로 성장 전략이 바뀐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정책 전환으로,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수출에 대한 장애가 제거되어 우리 경제가 국제 분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이것이 고속성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설명에는 미흡한 것이 있다. 대외지향 성장전략이란 경제(수출과 수입) 개방으로 세계시장 속에서 국제 분업의 이득을 얻는 것인데, 정작 세계시장의 크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교역량이 구미 선진국에서 공업화가 진행되던 1800년대 초 및 중반에 비해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실질기준으로 100배 이상 더 크다. 일찍이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밝혔듯이, 분업은 시장의 크기에 의해 제약된다. 국제분업도 당연히 세계시장의 크기에 의해 제약을 받으며 국제분업에서 얻는 이득도 세계교역량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학계는 이 점에 관해 큰 관심이 없었다.

<그림 4> 세계 교역량 (1990년 불변1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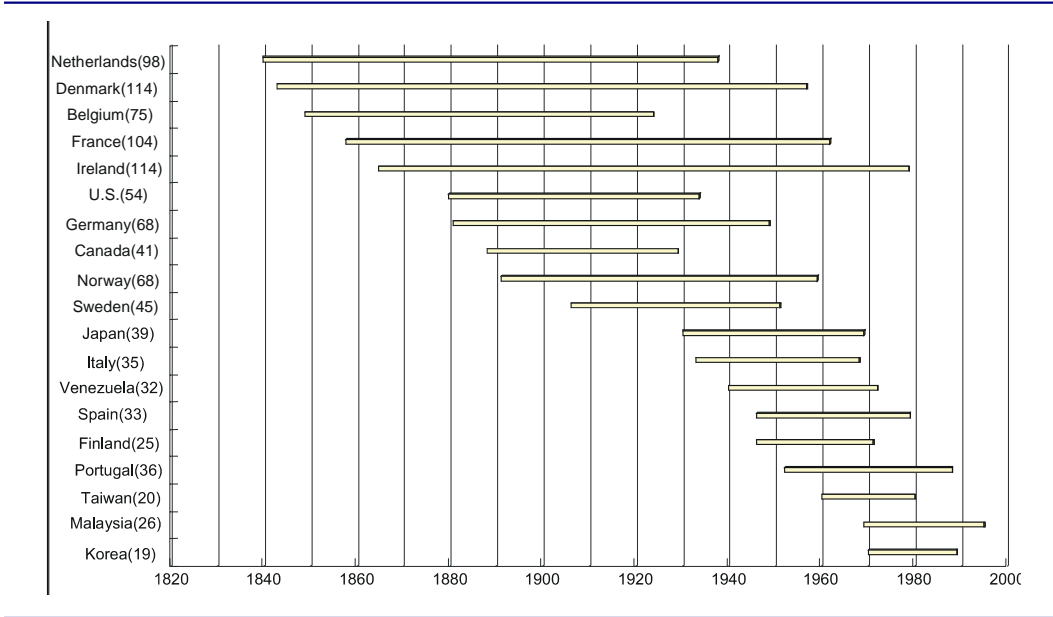


자료: Maddison(1995).

유정호(1997)는,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프랑스, 독일, 미국, 등 구미 선진국과 일본 및 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하는, 공업화를 이룬 동서양의 19개 국가들에 관하여 공업화의 시작 시점과 공업화에 소요된 기간의 길이를 추정하고 있다. 그 소요기간을, 제조업에 관한 통계를 얻기 어려운 제약 때문에,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총 취업자의 50% 이하로 떨어지는 연도부터 20% 이하로 떨어지는 연도까지라고 정의하고 추정한 것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를 생략하고 결과만 소개하면 <그림 5>와 같다. 이 그림에서 분명한 것은, 공업화의 시작 시점이 늦어질수록 그 소요기간

이 짧아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공업화 시작 시점이 늦어질수록 세계교역량의 규모가 커지고, 따라서 국제분업의 이득이 커지기 때문인데, 이 논문의 회귀분석에 의하면 세계교역량 규모가 1% 증가하면 공업화에 소요되는 기간은 0.35% 감소하였다.<sup>13)</sup> 이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공업화와 경제성장이 세계시장 규모의 증대에 크게 힘입은 것임을 뜻한다. 1960년대 초 세계시장의 규모가 1800년대에 비해 100배 이상이었음을 감안할 때 한국이나 대만의 성장 속도가 구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빨랐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림 5〉 공업화 소요 기간



자료: 유정호(1997).

이에 대한 두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공업화 소요기간의 단축이 과학기술의 진보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이다. 만약 그것 때문이라면 우리의 공업화는 구미 선진국의 공업화 과정을 시간에 관해 압축해 놓은 데 불과할 따름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경제의 공업화 경험은 선진국과 다르다. 선진국들에 비해, 노동집약적 산업이 자본집약적 내지 기술집약적 산업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여 불균형이 심하였고 그 여파로 무역수지의 불균형 또한 매우 심하였다. 이는 우리의 성장이 그들에 비해 훨씬 국제분업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며, 우리의 공업화 과정이 선진국의 공업화 과정을 시간에 관해 단순히 압축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의문은, 세계

13) 이 변수의 회귀계수는 1% 미만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공업화 기간 동안의 세계교역량 평균 증가율도 독립변수로 포함되었으나, 그 추정계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낮았다.

시장 규모가 증대한 것은 모든 국가에 마찬가지인데 왜 소수의 동아시아 국가만이 공업화를 달성했느냐는 것이다. 세계시장 규모가 커진다 해서 모든 나라가 자동적으로 득을 보는 것은 아니고 세계시장에서 국제분업에 참여해야 득을 볼 수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동유럽 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제무역에 관심이 없었고, 남미 국가들은 보호주의 아래 수입대체를 통한 공업화에 힘썼으며, 인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국제무역에 힘쓴 나라들은 동아시아의 몇 나라뿐이었다.

## 5. 결 론

위에서 우리경제 발전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1960년대의 수출촉진정책과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정책에 대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 때문에 우리 경제의 고속 성장과 공업화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결론내리기 어렵다. 1960년대 초에 시작한 수출급증은 우연성이 높은 세 번의 평가절하가 촉발한 것이다. 1960년 중반 이후의 수출촉진정책은 그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수출을 저해하는 효과를 중화함으로써 수출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였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중화학공업정책은 경제성장을 시켰다. 그 정책의 강도 높은 산업간 차별 대우가 당시 수출품의 대부분을 생산하던 경공업을 희생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우리의 고속성장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기적 이후의 경제성장은 국제분업의 이득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그림 4>가 보여주듯이, 1992년의 세계교역량은 구미선진국들이 공업화하던 1800년대에 비해 실질기준으로 500배 이상 크다. 현재 중국의 고속성장은 이렇게 방대한 세계시장에의 참여 없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경제의 고속성장은 1820년에 비해 100배 이상 컸던 1960년대의 세계시장에서 국제분업의 이득을 얻은 결과이다. 한 나라가 이 잠재적 이득을 얼마나 현실화하느냐가 그 나라의 경제성과를 좌우하고 있다. 동아시아 기적의 4개국들은 그 이득을 현실화하였던 나라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정책이 환율현실화처럼 중요 가격변수의 왜곡을 바로 잡거나, 수출촉진정책처럼 국제분업에의 참여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일 때에 우리 경제는 국제분업의 이득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 ■ 참고문헌

- 곽태원 (1985), 『감가상각제도와 자본소득과세』,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김광석·웨스트팔 공저 (1976), 『한국의 외환·무역정책』,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기획원 (1961),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62/66』, 서울: 경제기획원.
- 경제기획원 (1964),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64: 보완계획』, 서울: 경제기획원.
- 경제기획원 (1982), 『개발연대의 경제정책: 경제기획원 20년사』, 서울: 삼성인쇄.
- 유정호 (1991), “1970년대 중화학공업정책이 자본효율성과 수출경쟁력에 미친 영향,” 『한국개발연구』, 1991 봄.
- 유정호 (1997), “工業化 速度에 대한 世界市場 規模의 影響,” 『KDI政策研究』, 제II호.

한국은행 (1960), “우리나라 공정환율의 변천,” 『한국은행 조사월보』, 제14권 제12호.

Amsden, Alice H.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Chen, Po-Chih (1999), “The Role of Industrial Policy in Taiwan's Development,” in Thorbecke and Wan (eds.), *Taiwan's Development Experience: Lessons on Roles of Government and Market*, Boston: Kluwer.

Frank, Charles R., Jr., Kwang Suk Kim, and Larry E. Westphal (1975), *Foreign Trade Regimes and Economic Development: South Korea*,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Kim, Kwang Suk (1991), “Korea” in Papageorgiou, Michael, and Choksi (eds.), *Liberalizing Foreign Trade*, Cambridge, Mass.: Basil Blackwell.

Krugman, Paul (1994),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Lee, Suk-Chae (1991),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Promotion Plan (1973–79),” in Cho, Lee-Jay and Yoon Hyung Kim (eds.), *Economic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A Policy Perspective*, Honolulu: East-West Center.

Maddison, Angus (1995), *Monitoring the World Economy 1820–1992*, Paris: OECD.

Stern, Joseph, et al., *Industrialization and the State: The Korean Heavy and Chemical Industry Drive, 1995*, Cambridge: Harvar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Yoo, Jungho, “The Industrial Policy of the 1970s and the Evolution of the Manufacturing Sector in Korea,” KDI Working Paper No. 9017, Oct. 1990.

Yoo, Jungho (1997), “Neoclassical versus Revisionist View of Korean Economic Growth,” Development Discussion Paper No.588, Harvar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Yoo, Jungho (2008), “How Korea's Rapid Export Expansion Began in the 1960s: The Role of Foreign Exchange Rate,” Working Paper 08–18,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